

Special Issue Brief

March 2024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목 차

- I. 서론
- II. 미대선·의회 선거 시나리오별 예측
- III. 트럼프·공화당 공약 내용
 - 1. 무역·관세 분야 / 2. 산업정책 분야 / 3. 투자(inbound, outbound) 분야 /
 - 4. 제재·수출통제 분야 / 5. 친환경·에너지 규제 분야
- IV.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 1. 반도체 / 2. 전기 자동차 / 3. 일반 자동차 / 4. 철강
- V. 우리의 대응방향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은 흔들리는 다자무역체제와 보호무역 기조 등 새로운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유) 광장」의 산하기관으로 설립 되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국제통상환경을 면밀히 파악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식과 경험을 한데 모아 이를 소통하고 공유하는 열린 토론의 장으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2024 미국 대선: 주요 관전 포인트

대선·의회선거 시나리오와 통상 리스크

금년 11월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등장으로 미국의 급격한 정책기조 변경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번 이슈 브리프는 미국 대선과 의회선거 결과에 따른 우리의 대미 통상환경 변화를 전망하고자 한다. 미국 대선뿐만 아니라 의회선거 결과로 형성될 권력구조에 대해 4개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미국 통상정책의 전개 방향을 개괄적으로 전망한다. 이 중 트럼프가 대선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전제로, 트럼프 후보와 공화당이 밝힌 통상관련 공약과 예상되는 우리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영향을 짚어본다. 미·중간 전략적 경쟁, 자국우선 산업정책과 보호무역주의, 그리고 공급망의 파편화 등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통령·의회 선거로 인한 대미 통상환경의 변화는 정부와 기업에 법률문제 등 매우 복합적인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이므로 적극적인 리스크 예방과 관리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I. 서론

2024년은 최근 수년간 미·중간 전략적 경쟁과 지역 분쟁 발생으로 심화되어온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하여 글로벌 공급사슬의 파편화가 현실화되고 기업 영업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24년 중 세계 곳곳에서 치러질 선거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특히 11월로 예정된 미국 대통령 선거는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미국의 정책기조 변화 가능성으로 인하여 국제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3월 5일 '슈퍼 화요일' 공화당 경선에서 승리하고 하루 앞서 내려진 연방 대법원 판결로 대선후보 자격에 관한 사법리스크는 일단 해소되어 사실상 공화당 대선 후보가 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2020년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직을 놓고 재대결하게 될 전망이다.

미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상·하원 및 주지사 선거도 관전 대상이다. 미국은 3권 분립을 기반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정착시킨 나라로서 의회는 고유의 입법권과 대통령에 대한 다양한 견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오는 11월 선거결과에 따라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상·하원을 지배하는 현 구조에 변화가 초래될 수도 있어, 대선결과와 맞물려 추후 미국정치 지형이 요동칠 수 있다.

II. 미대선·의회 선거 시나리오별 예측

미국 정치권력의 정책방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대선과 의회 선거를 통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상·하원 중 하나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의회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적극적 재정정책의 사용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물론 대통령은 외교 및 통상분야에 일정한 재량이 있고 행정명령을 발령할 수도 있으나 의회 동의 없이는 상당한 제약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최석영 고문**

T. 02-6386-6620
E. seokyoung.choi@leeko.com

[약력보기 ▶](#)**이태호 고문**

T. 02-772-4396
E. taeho.lee@leeko.com

[약력보기 ▶](#)**박태호 원장**

T. 02-6386-6680
E. taeho.bark@leeko.com

[약력보기 ▶](#)**임채민 고문**

T. 02-6386-6630
E. chemin.rim@leeko.com

[약력보기 ▶](#)

상원은 2년마다 치러지는 매 선거 때마다 전체 의석수 100석의 1/3씩이 선거대상이 되는데, 2024년 상원 선거에서는 교체 대상 지역이 공화당에게 유리하다고 관측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추가 확보할 수 있는 의석보다 잃을 수 있는 의석이 많다는 것이다. 공화당 성향이 강한 웨스트버지니아주(WV) 민주당 상원의원 맨친이 지난 11월 불출마를 선언함으로써 민주당 승리는 요원해졌고 아리조나(AZ)는 민주당 표가 갈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외에도 몬태나(MT), 오하이오(OH) 같은 경합주를 방어해야 50석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 하원의 경우 상황이 보다 불확실하다. 하원은 전체 의석 435석 모두가 2년마다 치러지는 선거의 대상이다. 현재 공화당이 221석의 다수당이나, 이번 선거에서 5석만 빼앗기면 과반을 상실하게 되는데, 경합주에서도 양당간 지지율 차이가 미미한 상황이다.

공화당과 민주당은 대중국 정책, 자국우선 산업정책, 보호무역주의 및 해외 개입 등 분야에서는 정책방향이 유사하지만, 기후·에너지 정책, 다자주의·국제기구 정책 및 동맹국과의 협력 등 분야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정책이슈	민주당	공화당
무역·전략산업정책	전략산업의 리쇼어링	
대중국	전략적 경쟁자	
해외개입·중동	지속적 개입 지양	
기후	최우선순위	강한 반대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지지	화석연료·원자력 지지
동맹과 우방	자산	무임승차자
국제기구	개혁·유지	무시·훼손

(출처: EFCR: ecfre.eu)

이런 배경을 기반으로 미국 대선과 의회선거 결과 예상되는 정치권력 지형은 대체로 4개의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다. 첫째 바이든 대통령이 재임에 성공하지만, 상하원 지배정당이 갈리는 교착(Gridlock) 상황; 둘째 바이든 재선과 함께 하원도 되찾아 민주당 지배(Blue Wave) 재현; 셋째 트럼프가 당선되지만 상·하원 지배정당이 갈리는 교착상황; 마지막으로 트럼프 당선과 함께 상·하원도 모두 공화당이 장악하는 공화당 지배(Red Wave)의 시나리오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는 매우 기계적 분석이지만, 각 경우의 수에 따라 향후 미국의 정책방향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시나리오	백악관	상하원	정책방향(예측)	유리 분야	불리 분야
1	바이든	교착	현행기조 유지; 제한적 재정; 친환경; 동맹국 중시	인프라/산업재, 전기차(EV), 친환경	
2	바이든	Blue Wave	확장적 재정정책, 적극적 대외 및 친환경 정책	EV, 친환경	빅테크
3	트럼프	교착	재정축소 공약집행 난항; 외교, 통상 등 정책	인프라/산업재, 에너지(원자력), 반도체	EV, 친환경, 인터넷, AI
4	트럼프	Red Wave	무역규제, IRA 폐지, 대중 강공, 동맹국 경시 정책	인프라/산업재, 에너지(원자력), 반도체	EV, 친환경, 인터넷, A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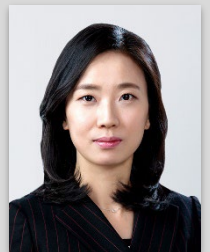
(출처 : 저자 편집)



정기창 외국변호사

T. 02-772-5904
E. kichang.chung@leeko.com

약력보기 ▶



주현수 변호사

T. 02-6386-6363
E. hyunsoo.joo@leeko.com

약력보기 ▶



박정민 변호사

T. 02-772-4916
E. jungmin.pak@leeko.com

약력보기 ▶



박정현 변호사

T. 02-6386-6649
E. junghyun.park@leeko.com

약력보기 ▶

첫째 시나리오는 현상유지로서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낮아 질 수 있다. 둘째 시나리오에서는 민주당이 복지정책 확대와 증세를 추진하여 확장 재정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는 바, 이 경우 빅테크 기업에게는 불리할 수 있다. 반면, 추가 친환경 정책이 추진됨으로써 배터리 및 전기차(EV) 분야에는 긍정적일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 하에서 트럼프는 감세정책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는 반면, 외교·통상 분야에서는 재량권을 가지고 강한 보호주의 드라이브를 걸고 대중국 탈동조화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빅테크 기업과 친환경기업들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는 감세정책이 추진되고 분야별로는 친환경, EV가 타격을 입고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상당한 부분이 수정되거나 철회될 수 있다. 그리고 동맹국 및 우방국들과의 관계 재정립 압박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III. 트럼프·공화당 공약 내용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전개될 통상환경의 변화가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되는 경우보다 증폭될 것임에 비추어 트럼프의 대선승리를 상정한 위 시나리오 3과 4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11월 선거에서 트럼프가 재집권하는 경우 ‘미국우선주의’ 강화와 중국과의 탈동조화(decoupling) 가속화는 물론, 우방국과의 관계 재정립도 불가피하여 글로벌 경제안보 환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가 특히 통상분야에 있어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정책을 일정 부분 이어받았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승리하여도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리스크는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이라는 데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위 시나리오 3과 4는 의회 권력 구조에 따라 실행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 방향성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가능성 자체를 집단외면했던 2016년 대선 때와는 달리 트럼프가 주창하고 있는 제반 정책방향이 공화당의 주류 정책 공약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시행될 정책 방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시행한 정책이 강화되는 방향이 될 것이며, 이러한 정책은 트럼프 캠프에서 주제별로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Agenda 47과 보수적인 think tank인 헤리티지 재단에서 작성한 ‘Project 2025’를 통해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¹⁾ 트럼프 후보는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통한 고용증대와 경제회복을 위한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latform)을 천명하고 있다. 1기 행정부에서와 같이 무역적자를 미국 일자리 축소 및 제조업 산업 퇴락의 주범으로 지목, 무역적자 축소를 강조하면서 관세인상을 주장한다. 또한 대중 견제를 강화하여 중국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decoupling)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에너지산업 규제 정책의 완화 내지 폐기를 공약하고 있다. 물론, 의회의 정치적 지형과 고용 증진 필요성을 포함한 경제상황 등 현실여건상 이러한 공약을 모두 실행에 옮기는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분야	공약 내용
무역·관세	무역적자 축소, 보편적 기본관세 도입, 상호무역법 제정, 대중국 무역조치
산업정책	미국 제조업 부활, 그린 뉴딜 폐지, 대중국 탈동조화
투자	대중국 규제강화, CFIUS 역할 강화·확대,
제재·수출통제	대중, 대러 제재·수출 통제 강화
친환경·에너지	규제 완화, 화석연료 공급증대, 파리기후협정 탈퇴, IRA 보조금 삭제·백지화

(출처: 저자 편집)



허난이 연구위원

T. 02-6386-6451

E. [nyhur](mailto:nyhur@leeko.com)

[@leeko.com](mailto:nyhur@leeko.com)

약력보기 ▶

1. 무역·관세 분야

미국의 경제안보에 위협이 되는 만성적 무역적자가 WTO의 최혜국 대우 원칙과 중국의 경제공세로 초래되었다고 보고, 모든 무역상대국으로부터의 모든 수입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현재 평균 3% 내외)에 10%p의 관세율을 추가한 보편적 기본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s)를 도입하고, 무역상대국이 미국 상품 수입에 부과하는 관세에 상응하는 관세율을 해당국 상품의 미국 수입시 부과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상호무역법(Trump Reciprocal Trade Act)을 제정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중국이 고관세,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노동 착취, 덤핑, 지적권 침해 등을 통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한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지위 박탈과 모든 중국산 상품에 대해 60% 이상의 관세 부과를 공약하는 한편, 중국산 상품에 대한 최소가격(800달러) 관세면세 중단 등을 제안하고 있다.

2. 산업정책 분야

미국 제조·국방산업 기반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국가 제조 이니셔티브(Strategic National Manufacturing Initiative)를 주창하고 전기차 생산에 중점을 둔 바이든 행정부의 그린 뉴딜정책 폐지와 미국 자동차산업 진흥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다. 중국으로부터 온조어린 기업에 대한 재정 및 세금 감면 혜택 제공, 중국 국영기업이나 중국에 outsourcing한 미국 기업의 미국 연방 정부조달 계약 금지, 국가 안보 상품에 대한 대중국 의존도 감소 및 단절 등 대중국 탈동조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한다.

3. 투자(inbound, outbound) 분야

에너지, 기술, 통신 등 전략적 국가자산을 포함한 미국내 인프라 시설을 중국이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기존 소유를 매각토록 하겠다고 공약하는 한편, 미국 기술의 중국 유출, 중국의 군사능력 강화, 미국 중요 공급망에 대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는 미국 기업의 대중국 투자에 대한 제한조치 마련 필요성을 지적한다. 또한 중국으로부터의 국가안보 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외국인투자위원회(CFIUS)의 우선순위 재조정, 일관된 집행·처벌 기준 수립, 중국 국영기업의 미국내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위원회 권한 확장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제재·수출통제 분야

중국의 민간-군사 융합정책(civil-military fusion policies)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응, 특히 신흥·기반 기술에 대한 수출통제와 중·러 관련 기업들에 대한 제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5. 친환경·에너지 규제 분야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인 미국의 에너지 위기는 자원부족이 아닌 과도한 녹색성장에 기인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환경·기후대응 전략보다는 석유·천연가스 사용 확대 등 에너지 안보 및 공급 증대에 중점을 두는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화석연료 생산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제한을 폐지하고 화석연료 공급 증대를 통한 에너지·전기 가격을 인하, 세계 최저 에너지 가격을 달성하겠다고 공약한다. 이밖에도 노인연금 등 투자자의 ESG 투자 금지를 공약하는 한편, 파리기후협약 재탈퇴,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대폭 삭감 내지 IRA 백지화 가능성을 예고하였다.

IV. 우리 산업에 대한 영향

트럼프가 재집권하여 미국의 무역 및 산업정책이 변화할 경우 우리 산업 및 통상환경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최근 수년간 급증한 대미 무역흑자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역적자를 가장 큰 경제안보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출범한 2017년 대비, 2023년 대한국 무역적자가 2.2배로 대폭 증가(231억불 → 514억불, 미국통계기준)한 사실을 간과하지 않고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를 축소하기 위한 전방위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한국의 대미 수출을 견인하고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 품목에 대한 미국의 규제 강화와 통상압력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1. 반도체

반도체는 미래 핵심기술 산업이라는 중요성에 비추어, 미중 전략적 경쟁 차원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를 확대하고 공급망 재편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의 수출통제에 대한 예외사유로 중국내 반도체 생산공장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 기업에 대해

지정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verified end-user) 지위를 철회할 가능성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미국내 반도체 공장 투자 보조금 지급에 대한 반대급부로 중국내 공장 증설 제한을 요구하는 기존 가드레일(guardrail) 조건을 강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HIPS Act 하에서 약속된 미국내 반도체 생산공장 건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가능성도 상정할 수 있다. 다만,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과 고용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할 때, IRA 만큼 리스크가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다.

2. 전기 자동차

트럼프가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정책을 폐기하고 IRA 보조금 축소 내지 IRA 폐기가능성을 예고한 것에 비추어, 현지투자한 한국기업의 이차 전지, 전기 자동차, 태양광 패널 등 생산시설 투자에 대한 IRA의 첨단 제조생산 세액공제(AMPC) 혜택 폐지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다만, 막대한 시설 투자에 따른 고용효과를 감안할 때 IRA 자체의 폐기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도 있다. 그러나 중국산 핵심 광물·부품으로 만든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해 IRA 보조금 지급을 배제하는 해외우려단체(FEOC) 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다. 법적 조치뿐만 아니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화석연료 사용 확대에 따른 재생에너지 수요 위축에 따라 전기자동차 및 이차 배터리 판매량 축소와 이에 따른 기존 투자 수익률 저하 우려도 있다.

3. 일반 자동차

미국의 대한민국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한국산 자동차의 한미 FTA에 따른 무관세 수입에 대하여 트럼프 1기 행정부시 한미 FTA의 폐기를 압박하면서 자동차 조항의 개정을 성사시켰던 선례가 반복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무역확장법 제232조 적용 방법 등을 통해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자발적 수출제한 조치(수출쿼터)를 취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상정할 수 있다.

4. 철강

철강 부문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무역확장법 제232조 조치를 취했던 분야로서 2기 행정부에서도 동 조치를 계승·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우리나라는 당시 대미 철강 수출쿼터 설정에 합의했는데,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는 기존 쿼터량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고, 이와 함께 반덤핑, 상계관세 등

무역구제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한편, 위와 같이 우리나라 주력산업 분야에 대한 미국의 직접적인 압박 외에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중국 탈동조화(decoupling)에 따라 중국의 경제회복 속도 저하로 우리의 대중국 수출감소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다.

V. 우리의 대응방향

강대국들이 경쟁적으로 기술혁신, 수출통제 강화 및 국내산업 보호에 치중하고 미·중간 전략적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치러지는 미국 대선 및 의회선거 결과는 우리 산업 및 무역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든 기업이든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해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이유다.

우선 국제질서의 대전환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거시적인 대응방향을 강구해야 한다. 향후 상당기간동안 미중 패권경쟁, 자국우선 산업정책, 외국인 투자심사, 수출통제 등이 강화될 것이며 환경·노동 문제와 무역규제가 연계되고 디지털 무역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이다.

둘째, 미국 대선 및 미의회 선거추이를 모니터링하고 각 시나리오에 따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전술한 시나리오 1, 2의 경우와 3, 4의 경우에 따라 향후 미국의 무역, 투자 정책이 변화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반도체, 전기자동차, 철강 및 에너지 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대비는 물론,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내 주요 인사 및 그룹과의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아웃리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공급망 안전성 확보, 기술유출방지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을 강화해야 한다. 우선적으로 특정국에 대한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고 다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정부 간 중층적 협력이 필요한 대목이다. 핵심 제품 및 기술 공급망의 생애주기를 관리하고 잠재적 취약지점(choke points)을 감시해야 한다. 핵심기술의 육성, 보호 및 유출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입법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중간 전략적 경쟁, 자국우선 산업정책, 보호무역주의 및 공급망의 파편화 등은 정부와 기업에 매우 복합적인 법률적 리스크를 가중시킴에 따라 이런 위험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해야 한다. 국제무역규범이 후퇴하면서 각국의 국내법의 역외적용이 확대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분야, 국가 및 지역 특성을 감안한 전문적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
- 1) Agenda 47은 트럼프 후보의 공식 공약사항이다. 한편, Project 2025의 경우, 다양한 스펙트럼의 보수진영 인사들이 참여(50여 단체와 360여명의 각 분야 전문가)하여 작성된 공화당 집권시 각 부처별 정책방향 제언집으로서, 포함된 내용에 있어서 강조점이나 세부내용에 있어 작성자간 다소 차이가 있다.

-
- 법무법인(유) 광장 [홈페이지](#)에서 모든 이슈브리프 발간물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 법무법인(유)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 원하지 않으시면 [수신거부](#)를 클릭해 주십시오.
-